

2014. 8. 26. (화) 오전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민생경제팀 강길성 팀장 (02-731-2420), 이나영 사무관 (2423)
거시금융팀 임상준 팀장 (02-731-2440), 이호영 사무관 (2441)

국민참여형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와 금융권 보신주의 혁신방안 제시

- 국민경제자문회의 제5차 회의 개최 -

- ◆ 높아진 안전수요에 대응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,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
- ◆ 창조경제의 주역인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기술금융·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, 감독관행 선진화로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

- 8.26일(화)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(의장) 주재로,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,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」를 개최하였음
- 이번 회의에서는 「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」과 「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」에 대해 논의
 - 먼저 「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」에서는 최근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‘대한민국 안전 대진단’을 실시하고 국가안전체계를 혁신하는 한편, 이를 계기로 안전산업을 신성장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
 - 다음으로 「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」에서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금융·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,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혁신 방안이 제안되었음

「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」 주요내용

- 「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」은 「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」(14.7.24일)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규모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확대 방침과 연계하여,
 - 재난·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계기로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음
 - 동 보고서는 현실성 있고 국민체감도 높은 과제 발굴을 위해 산업계 현장방문,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기초로,
 -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정택 부의장을 포함한 자문위원과 산업연구원,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건설산업연구원 등 민·관 연구기관,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/F 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음
- 자문회의는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급등하는 국민들의 안전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면,
 - 부분적 점검과 재난 대응·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점검과 예방·대비 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
 - 이를 위해서는 높은 안전요구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참여도와 관심을 끌어 올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인 민관협력을 유도하는 것을 중요과제로 인식

※ 자문회의의 국민 인식조사 결과(현대경제연구원 공동, '14.8.12)

- 우리나라의 안전의식과 종합 안전 수준은 낮은 반면, 안전요구는 높은 상황
 - 안전의식은 100점 만점에 17점('07년 30.3점), 종합 안전수준은 10점 만점에 5.3점(선진국 7.8점)
 - 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대부분(97.2%) 공감

- 이러한 배경에서, 자문회의는 전 국민의 참여 하에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하는 ‘대한민국 안전 대진단’을 실시 할 것을 제안
 -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은 온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‘집단지성’을 활용하여 사회 전 영역의 안전상태를 그물망*처럼 촘촘하게 점검하려는 것으로,
 - * (시설별) 교량, 건축물, 교통수단 등 / (대상별) 시설·수단별 종사자, 여성·노인·장애인·아동 등 / (상황별) 화재, 재해, 재난 등
 - 국민들이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련 App*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신고·제보하면,
 - * 안전디딤돌(소방방재청), 생활불편 신고(안전행정부) 등 부처·지자체별 기존의 신고·제보 관리시스템 활용
 -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 T/F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·평가하고, 지자체·관계기관 등을 통해 현장조사·보수·보강을 실시하며, 관련 예산·법령상 조치 등을 강구하는 체계
- 자문회의는 또한 ‘대한민국 안전 대진단’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ICT 기반 ‘안전 진단 통합시스템’ 구축을 제안
 - 이는 ‘대한민국 안전 대진단’을 상시화하는 것으로서, 기존에 지역별·분야별로 운영해온 안전진단 체계를 상호 연계·통합하여,
 - 국민 신고·제보를 바탕으로 Big data를 구축·공개·공유하며,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, 결과보고 등 처리결과가 국민들에게 환류되도록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임
- ‘대한민국 안전 대진단’과 ICT 기반 ‘안전 진단 통합시스템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관련 예산·조직·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

- 높아진 안전 요구와 함께 국가 안전대진단 시스템이 구축·운영될 경우, 관련 수요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Big data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안전산업*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

* 점검·진단 서비스, ICT융합, 시설물 보수·보강 및 건설, 안전 교육·컨설팅, 시설/행사 안전요원 등(상세예시는 [별첨 1]의 9페이지 참고)

- 안전산업의 빈약한 수급기반 등 국내 안전산업의 취약점과 공공수요의 중요성, ICT와 융합화 추세 등 안전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
 - (1) 선도적 정부투자, (2) 제도개선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(3) 연구개발(R&D) 확대, (4) 신상품·서비스·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조성, (5) 안전 금융발전 등으로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5대 과제를 제시

< 안전투자 예산의 획기적 확대 등 선도적 정부투자 >

- 안전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, 안전대진단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설의 유지·보수 투자비중을 확대
 - 특히, 학교* 시설투자 확대가 시급한 바,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학교시설은 조속히 보수·보강 실시 필요
- * 서울시 학교시설 전수조사('11.5)결과, 위험시설이 31동, 30년 경과시설도 332동(9.6%)을 차지
- * 반면에 서울시 학교시설 개·보수 예산은 지속 감소(천억원) : ('10년 이전)4.6 → ('11)1.8 → ('14)0.8
-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우수(雨水)저장시설, 사방설비 등 방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고, BTL 방식에도 민간제안제도 허용

<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기준 조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>

- 국내·외 표준과 동떨어진 검사·인증 등 안전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안전 규제의 대대적 정비·보강

※ 안전기술 인증 실패·지연 업체 사례

- 국내 안전기술 인증 실패 후 해외진출 성공사례 : 분무식 스프링클러
 - 국내 중소기업이 독일과 합작으로 개발,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였으나, 개별법에 따른 안전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, 국내 생산하고도 설치 불가
- 국내 안전기술 인증 취득의 어려움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 상실 사례 : 투척식 소화기
 - 소방규제 강화 등에 따른 제품수요 증대 예상으로 R&D투자 등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, 관련 승인 및 인증 취득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시장선점 곤란

- 안전에 관한 명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안전등급 정보제공 확대 제안
- 또한,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*하고, 안전 불감증 개선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

* (예) 불법구조변경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

< 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(R&D)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>

- 산업화 관점에서 센서·ICT 융합·생활안전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안전분야에 별도의 기술(산업)분류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,
-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, 초·중등 교육 강화 및 대국민 안전교육 내실화*를 제안

*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요령, 심폐소생술, 소화기 사용, 비상구 바로 알기 등 실생활 위주로 교육

< 안전 신상품·서비스·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 조성>

○ 우리 강점인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안전상품·서비스·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이들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 개척

- 안전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, 중소기업 지원형 종합 ‘안전랜드*’ 설치 및 개도국 진출·해외인증 획득 지원,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 진출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제안하고,

* 안전문화, 산업홍보, 재미를 결합한 체험형 테마파크로, 국산 신제품 테스트 베드로 활용

- 대·중소, 민관 공동 안전기술개발사업 확대 유도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안전분야*를 대·중소 협력방식으로 허용하여 글로벌 기업과 경쟁가능하도록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

* (예시) 국가기관 발주 보안관련 시스템(SW) 사업 등

< 의무보험 확대와 민간 금융상품(재난보험) 도입 >

○ 마지막으로, 재난위험이 있으나 보험 의무화가 안 된 취약분야*를 발굴하여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재난위험을 포괄·담보하는 민간 금융상품(재난보험) 개발·도입 방안 제시

* 여객운송업자,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

□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안전산업시장이 현재 GDP 0.4% 수준에서 1%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, (('13)6.7조원 →('17) 17.4조원)

○ 안전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30조원이상,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(산업연구원)

「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」 주요내용

- 금융위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도출에 주력하였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,
 - 국민경제자문회의, 금융권실무자, 기술기업인 등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, 향후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
 - (1) 기술금융 현장확산 (2) 모험자본 시장육성 (3)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세 가지 측면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
- 우선 기술금융의 조속한 현장 확산을 위해 금융거래에 기술가치 반영노력을 지속하고 향후 3년 내 기술금융 관행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
 - 기술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은과 기은의 현행 1,0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펀드를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, 기술금융 우수 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*를 제공
 - * 기보의 이차보전(최대 3%p) 지원확대(37.5억원→ 100억원),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및 정금공 온렌딩 등 저리자금 지원
 - 기술가치평가 투자 확대를 위해 「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」를 조성하고,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「세컨더리펀드」 및 「지식재산회수펀드」 규모를 확대
 - * 세컨더리펀드(1,275억원→ 2,675억원), 지식재산회수펀드(830억원→ 2,000억원)

- 9월 중 미래부·산업부·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TF를 구축하여 “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”을 마련하는 등, 과학·기술계와 금융계 사이에 존재하던 간극을 적극적으로 극복
 - 「기술금융 박람회」 개최, 우수직원 표창 및 TV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반기 중 집중 추진
- 다음으로 창업·벤처투자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성장사다리펀드를 마중물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고, 모험자본시장을 창조금융의 주축으로 육성하기로 하였음
- 지난해 8월 조성된 ‘성장사다리펀드’가 모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, 창업(1조원)→ 성장(4조원)→ 회수·재도전(1조원) 등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자금을 지원
 - 자금공급이 부족한 초기기업(창업 3년내, 기술우수기업)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, 크라우드펀딩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
 - PEF의 기업인수 및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코넥스 및 이전상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성장과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
 - 아울러, 우수중소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‘추가 상장 활성화 방안’을 조속히 시행하고 하반기 중에 시중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
-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적극 대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감독관행과 은행의 성과보상체계를 과감히 정비하기로 하였음

- 면책규정을 현행 **positive**방식에서 **negative**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의·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, 제재시 효제도를 도입하여 과거 잘못에 대한 문책을 폐지

-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여,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직원 잘못은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

- * 우리나라는 기관제재 중심의 선진국과 달리 개인을 제재하는 건수가 많음
 - ‘13년 기준 : (기관제재) 89건, (임원제재) 295건, (직원제재) 1,285건

- 아울러,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위규·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면책

- 건전성 중심의 종래 평가제도(CAMEL-R)와 별도로 ‘은행 혁신 평가제도’를 도입하여 은행의 창조금융 선도노력을 평가*하고 동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개

- *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, 포상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

- 은행의 내부성과평가(KPI)도 혁신성과를 반영하여 개선하고, 모범사례를 전파

- 금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 누적된 금융권 문화를 실제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·점검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

- 따라서,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「금융혁신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실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·공표할 계획

향 후 계 획

□ 오늘 보고된 두 안건 중,

- 「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」은 앞으로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
- 특히, 하반기 중 국민이 참여하는 ‘국가 안전 대진단’을 실시 예정
- 「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」은 금융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금일 별도 보도자료로 배포

□ 향후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과 「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」 등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된 현안들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고 마련해 나갈 계획임

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안건 참조

별첨 1. 「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」 1부.

2. 「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」 1부. 끝.